

# 주 69시간 근무 가능... 초과근로 '수당-휴가' 선택권 부여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주 52시간 틀 유지하고 유연성 더해 근로자대표제 권한·절차 명문화 건강권 관련 안전장치 마련 방침 野·노동계 반대... 국회 처리 미지수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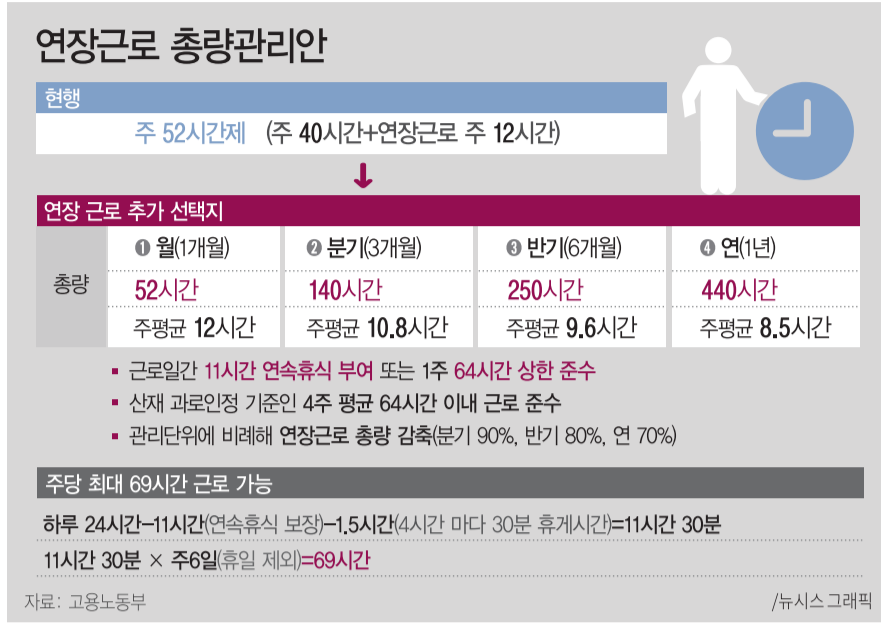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보



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

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몰아치기 노동’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개편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커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금융위, 금융시장·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

# 5200개 사업장 건전성 점검...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방안 논의 캠프 1조 펀드 상반기 중 추진 계획

금융당국이 전국 5200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분류한 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단기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과 미래의 수익 흐름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급을 계획 관리 감독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자금을 담당하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주택을 분양하는 수분양자 등으로 구성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돼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부동산PF 부실우려로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됐지만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사업장 ▲사업성우려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PF대출현황과 건전성,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을 점검한다.

정상사업장은 20조원 규모의 사업장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와 시공사의 참여 의향서, 토지소유주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금과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상품이다. 브릿지론을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본PF다. 정상사업자라면 보증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PF-ABCP는 만기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짧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이후 증권사,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은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만기연장을 통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재조정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앞서 KB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한 현대·롯데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한 바 있다.

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한다.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프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 ◆건설사, 정책금융 확대

이 밖에도 시공사인 건설사 지원과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건설사의 보증 PF-ABCP를 매입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건설사부실 등 공정 지연 사유가 발생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하고, 준공완료료 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해 지연사유 발생시 시공사를 교체하고, 준공관련 협조 필요시 대주단 부동산신탁사 간 합의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업성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계정과 캠코의 1조원 펀드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올해 코로나 관련 정책 1700억위안 투입... “관리조치 지속”

(한화 약 32조)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 관련 지출 약 80조 지방 정부 재정부담 어려움 더 커

코로나19가 중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기 위

해 8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는데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3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1700억위안(한화 약 3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주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방 정부들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관련 지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성 및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대규모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검역, 접촉자 추적, 백신 접

종 등 제로 코로나를 위해 4200억위안(한화 약 79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보고서는 “지난해 공공 재정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고, 재정 운영은 뼈대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정부별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컸다.

경제매체 차이에 따르면 제조 중심 지인 광둥성은 작년에 PCR 테스트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기업 보조

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710억위안(한화 약 13조원)을 썼다. 저장성과 수도 베이징이 각각 434억 위안, 300억위안 규모다. 빈곤한 산시성조차도 제로 코로나를 위해 190억위안이나 써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 예산은 B급 전염병에 대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관리 정책의 꾸준하고 질서 있는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